

배포일시	2022년 11월 7일(월)
보도일시	즉시

< 민주연구원 정책브리핑 >

이태원 참사(10·29참사)는 사회재난, 정부는 책임지고 진상규명하라!

-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원장 노웅래 의원)은 11월 7일(월) “이태원 참사(이하 10·29참사)는 사회재난, 정부는 책임지고 진상규명하라!” 라는 제목으로 정책브리핑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지난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10·29참사는 사회재난으로 국가가 무한 책임을 지고 희생자에게 배상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 윤기찬 연구위원은 “10·29참사는 이태원역 부근 경사진 좁은 골목에 모인 할로인 인파로 인한 압사사고로 사망자 157명, 부상자 187명을 발생시킨 대형 사회재난” 이라고 지적했다. 윤 위원은 “발생 전 관할 구청과 경찰서에서 10만 이상의 인파를 예상하고 이와 관련된 안전대책 회의가 있었음에도 별도의 경비 인력을 배치하지 않고, 마약사범 단속 목적으로 하는 경찰만 137명을 배치하여 안전의무를 고의로 무시하였다.” 고 지적했다. 그리고 “사건 당일 4시간 전부터 이어진 압사 가능성에 대한 112신고도 무시한 채 결국 대형 참사를 일으켰다” 고 설명했다. “책임소재가 국가에 있고, 배상의무가 있는 사회재난에 대해 행안부 장관의 사과만 있었을 뿐 대통령의 공식적 사과입장은 발표되지 않고 있다”
- 보고서는 “사회적 재난의 책임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규정된 것처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고, 압사 사건 자체가 개인이 책임질 수 있는

안전의 범위를 넘어선 것” 이라고 설명하면서, “경찰의 시민 안전 및 질서 유지에 대한 사전인지에도 불구하고 무작위로 발생한 참사에 대해 「국가배상법」, 「민법」 등에 근거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는 바, 지원금뿐만 아니라 희생에 대해 국가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고 지적했다. 특히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는 참사에 대한 무책임과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고 제안했다.

- 정부의 주장대로 “주최 측이 없는 행사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 없고, CCTV 분석 등을 통한 사건의 원인규명 우선이라는 논리는 단순히 해명에 불과하고,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에 극도의 혼잡과 위험한 사태에 해당되는 현장을 방치한 것” 에 불과하다고 지적하였다. 윤 연구위원은 “윤석열 정부는 안전에 대한 국가의 무한책임의 중요성을 각성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결단해야 한다” 고 설명했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를 비롯한 사회재난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단순 위로금 지원에 더하여 국가배상의 책임을 확실히 져야 한다” 고 지적했다.

- 노웅래 민주연구원장은 “이러한 대형 참사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에 사회재난에 대한 국가책임 및 처벌조항을 추가하고,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인파사고를 안전의무로 명시해야 한다” 고 설명했다. 특히 “10·29참사로 인한 일명 ‘이태원 블루’ 를 겪고 있는 희생자 가족, 주변 상인, 그리고 일반국민들에게 정서적 지지와 심리상담 등을 제공하여 트라우마에서 벗어나 일상생활을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까지도 국가의 책임” 이라고 강조하였다.